

북한 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¹⁾

Measurement and Tasks of Living Costs of North Korean Residents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현인애 |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효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활비 측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한 북한이탈주민 37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원천은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 순이었다. 가구 월 지출은 14만 7천 원(남한 원)인데, 주관적 지출로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월 31만 7천 원(남한 원), '바듯하게 생활하자면' 월 8만 2천 원(남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피복·신발비 9.9%,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8.4%, 교양·오락비 5.2%, 교통·통신비 2.5%, 보건의료비 2.0%, 교육비 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 등에서 남한주민과 다르게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추가 품목들이 확인되었다. 북한 주민의 생활비 측정을 위한 과제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하는 품목 개발, 가구원 수에 따른 조사, 정교한 가격 환산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은 어떠할까? 생활을 위

한 품목은 무엇이며 품목별 비용은 얼마일까? 일

부에서는 북한 공식 경제의 붕괴를 주장하지만,

언론을 통해 확인되듯이 북한 주민들은 일상생활

1) 이 연구는 조성은, 민기채, 김예슬, 김유휘, 주보혜, 송철중,.... 박희진.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 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의 제8장 북한 주민 소비 품목의 탐색에 관한 내용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을 영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과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일정하게 축적되어 왔다(민기재 외, 2017; 이철수 외, 2017; 통일연구원, 2018;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4).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영유아, 장애인, 노인, 산모 등의 특정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연금, 건강, 영양 등의 특정 이슈에 주목하여 왔다. 기존 연구들은 해당 인구집단의 주요한 사회적 위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 주민, 특정 이슈가 아닌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일상적으로 어떠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인 취약계층으로 대변되는 집단을 넘어 일반 주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취약계층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넘어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소비의 품목과 지출 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한은 1973년부터 정기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남한 주민의 소비 실태를 분석하여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해 3년 주기로 표준가구의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지역별 가구 규모별·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왔다(김태완 외, 2017). 남한은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비’ 실태

를 분석해 왔던 것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 이에 북한 정부의 공식 자료에 접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북한의 소비생활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간접적인 경로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설문조사 또는 질적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활비 측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글의 차별성은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에 기초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최초의 설문조사라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생활 실태를 연구한 것은 일부 있으나, 그 연구들은 개방형 질문 형식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남한 표준생계비 품목을 기준으로 한 조사 결과는 향후 남북 간 생활 격차 완화를 위한 모색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이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을 선별하고 생활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북한 주민의 표준생활 수준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 주민 간 소비 품목의 차이를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 생활 격차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

가.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 방법

북한 주민들의 소비 품목과 소비량을 확인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연구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계측, 북한의 주민 생활 실태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면서 이 글에 필요한 질문지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이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 내용 구성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이 북한 주민의 생활비 계측에 적합한지, 추가하여야 할 품목은 없는지 논의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북한 생활상에 부합하는 품목을 일부 개발함으로써 북한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에 더 다가가고자 하였다.

구성된 질문 문항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수행하였다.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4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에 기초한 일부 품목을 추가하였다.

본 조사는 사전에 교육된 연구진 3명이 인터뷰어가 되어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상담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지를 제시하고 1:1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작

성함과 동시에 질적 인터뷰를 수행하는 혼합 연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방식(최저생계비 계측 품목)과 반구조화된 방식(질적 인터뷰 심화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북한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해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월별 소비량과 가격을 조사하였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을 하였다는 응답자 수에 주목하였다. 달러, 위안화, 북한 원화 중 응답자가 대답하기 쉬운 화폐 단위로 응답하게 하였고, 북한 만 원 단위로 바꾸어 계산하여 조사 결과를 작성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30분부터 120분까지 각이하게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고지된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전반적인 연구 진행은 연구진이 소속된 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는 KNUT IRB 2020-21(승인 일자: 2020. 8. 6.)]을 받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대상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한 37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이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 37명의 성별, 연령, 탈북 연도, 탈북 당시 북한 거주지, 학력, 직업 등의 정보는 원보고서(조성은 외, 2020, p. 24,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었다. 북한에서 가계는 여성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남성은 가계 상황에 대한 구술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령은 20대 5명, 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1명, 70대 1명이었

다. 30~50대가 대다수였다. 탈북 연도는 2013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3명, 2018년 8명, 2019년 18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는 2013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가능한 한 최근 입국한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북한의 가격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등장 이후 2013년 말 새로운 경제 개선 조치를 실시하고 나서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탈북 시기를 2013년까지 확장해도 물가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가장 오래된 탈북 연도가 2013년이었으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이들은 해산시를 비롯한 양강도 지역 출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2018년과 2019년 탈북한 사람이 전체 면접자 중 70.2%였다.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양강도가 23명(62.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함경북도 7명(18.9%), 함경남도 4명(10.8%), 평양시 2명(5.4%), 평안남도 1명(2.7%)이었다. 대부분이 시, 군 소재지에 거주하였다. 학력은 중졸 3명, 고졸 18명, 전문대졸 11명, 대졸 5명이었다.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학교 졸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북한에서의 직업은 장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노동자 8명, 주부 5명, 사무원 4명, 전문직 3명, 부업 2명, 농장원 1명이었다. 37명 중 주부는 5명에 불과하였고, 32명의 여성은 공

식 또는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인 가구 10명, 4인 가구 9명, 5인 가구 3명, 단독 가구 2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더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원보고서(조성은 외, 2020, p. 26,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다.

나.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 결과

1) 소득과 지출

가구의 수입 원천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장[직장에서 받는 월급, 직장에서 받는 배급(시장가격으로 환산)], 장사(장사를 통해 번 소득), 부업[부업을 통해 번 소득(소토지, 약초, 산나물 채취, 돼지 사육 등)], 수급(국가로부터 받은 수급액), 송금[외국(주로 남한, 간혹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받은 송금]으로 제시하였다.

가구 연 소득(북한 만 원)은 다섯 가지 수입 원천의 총합이며, 가구 월 소득(북한 만 원)은 가구 연 소득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남한 원으로 환산한 가구 월 소득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간 공식 환율은 없다. 이에 각각의 달러 환율비를 고려하였는데, 북한 원은 1달러당 8,000원, 남한 원은 1달러당 1,100원으로 가정하여 남한 원은 북한 원의 0.1375배(=1,100원 ÷ 8,000원)로 간주하였다. 소득 원천별로 그 빈도와 비율을 비교한 결과, 소득 원천으로는 장사가 25가구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직장 22가구, 송금 11가구, 부업 8가구, 수급 3가구로 응

표 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가구소득 원천

(단위: 빈도, %, 북한 만 원, 연)

분류	직장	장사	부업	수급	송금
가구 빈도수	22	25	8	3	11
소득 원천 총액	3,722.46	56,016.00	1,149.70	4.98	13,048.00
비율	5.03	75.76	1.55	0.01	17.65

주: 복수 응답.

자료: 조성은, 민기재, 김예슬, 김유휘, 주보혜, 송철중... 박희진.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3. (표 8-5).

답하였다. 소득 원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았을 때, 장사가 75.7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송금 17.65%, 직장 5.03%, 부업 1.55%, 수급 0.01%였다.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 (년로보장비) 순이었다.

그 결과를 볼 때,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가구가 22가구나 되었지만, 실제 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반면 송금을 받았다는 가구의 소득 비율은 17.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년로보장비로 대변되는 국가 사회보장급여의 비율은 0.01%에 불과하였다.

조사 대상의 월평균 소득액은 북한 원화로

168만 9천 원, 한국 원화로는 23만 2천 원이었다. 지출은 객관적 지출과 주관적 지출을 모두 조사하였다. 가구의 월 객관적 지출은 14만 7천 원(남한 원)인데, 주관적 지출로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월 31만 7천 원(남한 원),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월 8만 2천 원(남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넉넉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2배의 지출이 필요하며, 빠듯하게 살아야 한다면 현재보다 약 2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반적으로 평균값보다 중위값이 낮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 인구

표 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참여자의 월 소득 및 지출 평균값과 중위값

(단위: 북한 만 원, 한국 원, 월)

분류	소득		객관적 지출과 주관적 지출			
	송금 제외 월 소득	송금 포함 월 소득	가구 월 지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평균값	북한 만 원	145	168.9	107.1	230.3	59.6
	한국 원	199,375	232,238	147,263	316,663	81,950
중위값	북한 만 원	91.1	95.5	60	132	30
	한국 원	125,263	131,313	82,500	181,500	41,250

자료: 조성은 외.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4. (표 8-6).

집단 간 소득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지출 측정에서 평균값과 동시에 중위값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품목별 지출

가구당 월 생계비 추정은 본 조사의 평균 가구원 수인 3명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이에 1인당 소요액 산출이 가능한 비목인 식료품비와 피복·신발비에 대해서만 가구원 수인 3명을 곱하여 가구당 비용을 계산하였다.

가구당 월 생계비를 추계한 결과, 조사 가구의 평균 월 생계비는 133만 원(북한 원), 18만 3천 원(남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가족의 월 생계비 지출은 총 얼마라고 생각했습

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평균값 107만 1천 원(북한 원)에 비해 1.24배 많은 금액임을 유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생계비 비목별 지출 비율을 보면,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뒤이어 피복·신발비 9.9%, 주거비와 광열·수도비 8.4%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한 부문은 교육비로 1.7%에 불과하였고, 보건의료비 2.0%, 교통·통신비 2.5% 순이었다.

3) 북한 주민 생활비용 측정을 위한 소비 품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주민 생활비용 측정을 위한 소비 품목을 10개 비목별로 남한의 표준생계비 비목에 대한 유지, 제거, 추가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때 ‘유지’ 품목은 남한주민과 북한 주민 간 소비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표 3. 가구당 월 생계비

(단위: 빈도, 북한 만 원, 남한 원)

구분	품목	1인 소요액 *3	가구당	합계		%
				북한 만 원	남한 원	
1	식료품비	25.9*3		77.7	106,838	58.3
2	주거비, 광열·수도비		11.2	11.2	15,400	8.4
3	가구 집기·가사용품비		4.7	4.7	6,463	3.5
4	피복·신발비	4.4*3		13.2	18,150	9.9
5	보건의료비		2.7	2.7	3,712.5	2.0
6	교육비		2.21	2.21	3,039	1.7
7	교양·오락비		6.9	6.9	9,488	5.2
8	교통·통신비		3.31	3.31	4,551	2.5
9	기타 소비지출		4.5	4.5	6,188	3.4
10	비소비지출		6.85	6.85	9,419	5.1
	합계			133.27	183,248.5	100.0

자료: 조성은 외.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14. (표 8-6).

을 의미하며, ‘제거’ 품목은 남한주민은 소비하지만 북한 주민은 소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추가’할 품목은 남한주민은 소비하지 않지만 북한 주민은 소비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유지는 공통되는 소비 품목, 제거 및 추가는 차이 나는 소비 품목이다. 이러한 세 가지 구분을 통해 남한과 북한 간 소비 실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해당 품목을 사용한 가구 빈도가 4가구 이상일 경우 ‘유지’, 3가구 이하일 경우 ‘제거’, 3가구 이상이면서 북한 표준생활 모형 개발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품목은 ‘추가’로 표시하였다.

먼저 식료품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햄, 튀김 닭, 유산균 발효유, 갈치, 어묵, 참치캔, 도토리묵, 부추, 버터, 케첩, 케이크, 비스킷, 보리차이다. 추가될 품목은 사탕 과자이다. 주거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삭제된다. 유지될 품목은 조달비용과 도배비이다. 제거될 품목은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광열·수도비에서는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 및 취사비를 세분화하여 재구성하였는데, 그 품목들이 모두 추가된다.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 및 취사비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 항목들이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될 품목은 공식 전기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 난방, 취사이다. 가구 집기·가사용품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문갑,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랩,

쿠킹호일, 살충·방충제, 가구 집기 수선료, 쓰레기봉투, 음식물 처리 비용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한편 기타 일반 가구와 기타 가정용 가구를 추가하였는데, 해당 빈도가 모두 0이어서 추가할 필요가 없다. 피복·신발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세탁료 중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과 숙녀복 상하 드라이클리닝이다. 추가될 품목은 장화와 지하족이다. 보건의료비에서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유지된다. 제거될 품목은 위생대(나이트용)이다. 추가될 품목은 없다. 교육비에서는 많은 품목들이 제거된다. 교재비 품목을 ‘교재(총교재비)’, ‘교과서’, ‘참고서’로 변경하여 조사하였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교육비 중 개인 과외, 농촌동원/청년근위대, 운동회/원족, 답사/견학/야영을 추가하였다. 원족이 답사/견학/야영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기존의 운동회 품목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원족(답사/견학/야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문방구비 품목에서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와 ‘공’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교양·오락비에서는 많은 품목들이 유지된다. 본 조사 분석의 기준으로 제거될 품목은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아동·청소년용 CD, 아동·청소년 영화 관람, 유선방송이다. 추가될 품목은 DVD 플레이어, 노트북, 노트텔이다. 다만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은 최근 컴퓨터 활용의 경향을 볼 때 향후 북한 내 소비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된다. 교통·통신비에서는 상당수의 품목이 이번 조사의 기준으로는 제거 기준에 해당되

었다. 직장과 교통비 품목 중 '기타'를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 조사된 항목은 없었다. 교통비, 통신비,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 품목 중 상당수가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최근 북한 내에서의 교통, 통신 소비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추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 내 통신비용 부과 체계는 좀 더 면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기타 소비지출에서는 교제비만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다른 품목들은 그대로 유지할 만하다. 비소비지출에서는 기존의 품목들은 모두 제거될 필요가 있다. 대신 북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등에 내는 부담금과 장세/토지세 품목들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 소비 품목에 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수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생활양식은 유사하며, 그에 기초한 품목들이 이미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에 과학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 반만년의 역사를 공유해 온 반면, 현재의 분단체제는 75년에 불과하기에 유사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남한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주요하게 제거하여야 할 품목들은 생계비에서 햄, 튀김 닭, 유산균 발효유, 갈치, 어묵, 참치캔, 도토리묵, 부추, 버터, 케첩, 케이크, 비스킷, 보리차, 주거비

에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구 집기·가사용품비에서 문갑,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랩, 쿠킹호일, 살충·방충제, 가구 집기 수선료, 쓰레기봉투, 음식물 처리 비용, 피복·신발비에서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세탁료)과 숙녀복 상하 드라이클리닝(세탁료), 보건의료비에서 위생대(나이트용), 교육비에서는 교재비·문방구비에서 상당수 항목들, 교양·오락비에서 프린터, 키보드, 아동·청소년용 CD, 아동·청소년 영화 관람, 유선방송, 교통·통신비에서 교통비, 통신비, 휴대전화, 인터넷 관련 품목 중 상당수 항목들, 기타 소비지출에서 교제비, 비소비지출에서 근로소득세, 균등분주민세, 재산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다. 이러한 품목들은 북한의 경제적 저발전성, 사회주의식 세외 부담 부과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남한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주요하게 추가하여야 할 품목들은 식료품비에서는 강냉이, 사탕과자, 광열·수도비에서 공식 전기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 난방, 취사로의 세분화, 교육비에서 개인 과외, 원족(답사/견학/야영),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공, 교양·오락비에서는 노트북, 노트텔, 비소비지출에서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장세/토지세이다. 이러한 품목들이 추가된다면 북한의 생활상을 더욱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남한의 표준생계비 비목에 기초한 북한 주민 생활비용 측정을 위한 소비 품목

분류	유지	제거	추가
식료품비	제거 이외 모든 품목	햄, 튀김 닭, 유산균 발효유, 갈치, 어묵, 참치캔, 도토리묵, 부추, 버터, 케첩, 케이크, 비스킷, 보리차	사탕과자
주거비	조달비용, 도배비	보증보험료, 인지세,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없음
광열·수도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 및 취사비의 세부 품목 추가하여 재구성	없음	공식 전기 요금,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공식 상하수도 요금, 실제 상하수도 요금, 난방, 취사
가구 집기·가사용품비	제거 이외 모든 품목	문갑,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청소기, 랩, 쿠킹호일, 살충·방충제, 가구 집기 수선료, 쓰레기봉투, 음식물 처리 비용	없음
피복·신발비	제거 이외 모든 품목	세탁료 중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과 숙녀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장화, 지하족
보건의료비	제거 이외 모든 품목	위생대(나이트용)	없음
교육비	교재(총교재비), 참고서, 개인 과외, 운동회, 연필 샤프, 샤프심, 볼펜, 색연필, 초등학교 공책, 중학생 공책, 스케치북, 크레파스, 중학생 그림물감, 붓, 지우개, 칼, 가위, 풀, 색종이, 초등학교 필통, 중학생 필통, 초등학교 자, 중학생 자, 초등학교용 줄넘기, 앨범	유지 이외 모든 품목	보통교육비 중 개인 과외, 농촌동원/청년근위대, 원족(답사/견학/야영), 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 공
교양·오락비	제거 이외 모든 품목	프린터, 키보드 및 마우스, 아동·청소년용 CD, 아동·청소년 영화 관람, 유선방송	DVD 플레이어, 노트북, 노트텔
교통·통신비	교통비 중 가장 출근, 주부 외출, 택시, 친지 방문, 통신비 집전화 요금 기본료, 전화기 구입비, 휴대전화 사용 요금, 휴대전화 구입비	유지 이외 모든 품목	없음
기타 소비지출	제거 이외 모든 품목	교제비	없음
비소비지출	없음	모든 품목	직장, 인민반, 여맹/직맹/청년동맹, 학교 등에 내는 부담금, 장세/토지세

주: 복수 응답.

자료: 조성은 외.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83-303.

3.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 과제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 측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생활상에 부합한 품목을 더 정교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며, 한반도 지역에 거주하고, 21세기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서 큰 차이는 없다. 특히 남한 최저생계비 비목을 고려할 때, 11개의 대분류와 대분류하의 품목들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는 다른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양식을 가진 경제 시스템이자 저발전 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하는 또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적합한 품목들을 추가하거나 내용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한의 최저생계비 비목과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품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의 경우, 직장 월급(현금, 현물, 인사차례로 받는 돈 또는 물건 포함), 농장원의 경우 분배, 알곡 현물 분배 등 연간 소득, 장사 업종과 월평균 수입 또는 연간 소득, 부업(소토지 농사, 짐승 기르기 등을 통해 얻은 연간 소득), 가족 중 사회보장비, 년로보장비 수급자와 받은 액수, 부채와 부채로 인한 이자 등 북한의 실정을 더 잘 반영한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 외 건물(사업장, 창고, 상

가), 소토지(평수, 가격), 사업 설비(기계, 영업용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선박 등), 현금·골동품·귀금속 등을 합산한 총액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탐색적 성격의 조사로 인해 인터뷰 참여자 37명이라는 제한된 대상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조사에서 주목한 점은 해당 품목을 소비하는 가구들의 빈도와 가격이었는 데, 품목의 등급이 각이하므로 가격도 상이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격보다는 빈도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탈북 시점이 최근인 북한이탈주민을 다수 인터뷰하기 위한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원 수가 다양한 가구들을 유엔인구기금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표집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남한과의 비교를 위해 4인 가구로 가구원 수를 표준화하기 위한 시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구기금 조사는 4인 가구가 34.7%로 가장 많고 5인 이상 가구가 28.2%로 그 뒤를 잇는 반면(UNFPA, DPRK, 2015, p. 19), 본 조사는 3인 가구가 35.1%로 가장 많고 2인 가구와 4인 가구는 각각 27%, 24.3%였으며 5인 가구는 8.1%에 불과하였다. 유엔인구기금 조사의 가구원 수와 본 조사의 가구원 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유사하게 표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에서는 일부 품목을 총가구원 수로 나누어 1인당 소비량 측정을 시도하였

고, 공동 이용 필수품들은 품목의 특성상 가구 단위로 측정하였다. 향후 남한 최저생계비 계측 시 활용하는 4인 가구 기준의 유사 연령대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할 필요도 있다. 남한에서 최저생계비 조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북한에 대해서도 4인 가구만을 선정해야 하지만, 표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넷째, 상품 가격에 대한 환산이다. 거주 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사용 화폐가 상이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상품 가격을 중국 위안화, 달러, 북한 원으로 각이하게 응답하였다. 최종적으로 북한 원화로 환산하였는데, 거주 시기가 다르면 환율 차이가 생기므로 과대 또는 과소 환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북한에 거주 하였던 북한이탈주민을 표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의 소비와 남한에서의 소비를 균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소비는 사적 소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또 국가에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소비 품목과 지출 총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바로 여기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 차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지만, 소비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지원이 낮다. 반면, 사회주의는 다양하고 충분하게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도, 소비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지원이 높다. 따라서 남

북 간 소비 실태를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사회주의 생산양식은 소유관계에 대해 달리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소유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그 집중 과정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 소유 밑에서 형성된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으로 전화되며 따라서 생산력과 소유관계 간의 불가피한 적대적 모순을 발생시킨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모순은 자본주의적 소유를 없애고 전 인민적 소유가 수립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50).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한 것이므로 모순적이라는 비판이다. 그 모순 해결은 전 인민적 소유, 즉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시작한 바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프로레타리아 독재정권이 사적, 자본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던 중요 생산수단을 수탈하여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것”으로 정의하며(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59), “우리 당과 인민정권은 3.7제 등 소작료를 감면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제와 그 주구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조건이 성숙되자 1946년 3월 5일 역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한 바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51).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전 인민적 소유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결국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무료 또는 낮은 이용료로 소비가 가능한 북한의 전

인민적 소유관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 주민의 소비 품목 총량과 소비 지출의 총합에 대한 등가 비교는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 글은 북한 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활비 측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측정의 결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하에서 양산되고 있는 소득 격차 및 지출 격차가 북한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기에, 소비 소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청된다. 소비 패턴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식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비 소외 가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의 평균값보다 중위값이 낮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도 불평등이 일정 수준 목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수의 특정 가구는 외식이 잦고, 남한으로 먼저 간 친척에게서 거액을 송금받으며, 문화 향유 수준도 높고, 비싼 주택을 보유하는 등 생활 수준이 높다. 특히 이 글은 주로 출신 지역이 양강도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평양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식품 지출총액을 볼 때, 채소 및 과일[1만 2천 원(남한 원)] > 육류·낙농품·어개류[9천 원(남한 원)] > 조미식품·빵·차·주류·외식[7400원(남한 원)] > 곡류 및 식빵[6900원(남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북한은 강냉이나 죽으로 생계를 연명했던 시대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식생활을 하고 있다.

셋째, 의식주 지출 비율은 높고, 교육비와 보건의료비 지출은 낮다. 가구 월 생계비 중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복·신발비가 9.9%로 높고, 주거비와 광열·수도비의 합이 8.4% 순이다. 생활필수품인 의식주 지출의 합이 76.6%로 4분의 3이나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게 지출한 부문은 교육비로 1.7%였고, 보건의료비 2.0%, 교통·통신비 2.5% 순이었다. 이러한 지출 양상은 서비스형 복지가 강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에 따른 소비 품목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위하여 양강도 지역은 나무, 함경북도는 갈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양은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

비 지출은 지역에 따른 사용 재료와 방식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난방용 지출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은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소비 품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광열·수도의 경우 전기에서는 불법 전기 비용, 태양광판, 배터리 지출비용, 난방에서는 나무 구입 비용, 수도에서는 직접 펌프로 길어다 쓸 때의 지출이 있다. 교통·통신비의 경우 교통에서는 타 시·도·군 이동을 위한 비법적 개인 버스 또는 기차 요금 지출이 있으며, 통신에서는 인터넷 연결의 제한으로 공식적 통신비용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비공식적 통신비 지출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노트텔 [Enhanced Versatile Disc(EVD) 플레이어]과 DVD 플레이어를 통해 시청하는 CD, USB 매체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득 원천 측면에서 볼 때, 남한과는 다른 사업소득, 송금 등의 소득 원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식 경제에서 받는 임금은 시장가치가 너무 낮아 큰 의미가 없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지 의문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비공식 경제에서 생계비를 충당해 가고 있다고 진단해 왔다. 이 글도 동일한 관점에서 비공식 경제를 통한 소득 원천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토지 등을 활용한 비공식적 부업소

득과 장마당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은 남한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비공식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북한 주민 중 일부이며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송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가구 중 11가구가 송금을 받았다고 한다. 부정기적이지만 그 액수는 전체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에서의 송금은 남한과는 다른 독특한 소득 원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곱째, 비공식 경제의 비대환(informal economy heavy)과 공식 경제의 왜소함(formal economy light)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공식적인 계획경제를 통한 소득보다는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경제를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원천 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았을 때, 장사가 75.76%로 가장 높고, 송금 17.65%, 직장 5.03%, 부업 1.55%, 수급 0.01%였다.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 순이었다. 직장에서 소득을 얻은 가구가 22가구나 되었지만, 실제 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 전체 주민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가 직장을 통해 번 수입은 극히 적고 장사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고 있었다. 비공식 경제의 비중이 더 커질 경우, 비공식 경제를 활용할 능력이 없는 개인들은 점점 더 소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 표준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남북 간 사회 격차는 더 커질 것으

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의 공식 경제가 약해지고 비공식 경제가 커지고 있다는, 즉 '시장이 계획을 구축'해 가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여덟째, 같은 항목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남북 간 비교 시 등가로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주거,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획득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전 인민적 소유의 대상이므로 무상으로 배급되거나 매우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 교육, 보육, 주거, 연료, 공공시설 이용 등의 사회서비스는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므로(민기채, 2017, p. 463), 관련 소비 품목들의 실제 소비액은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적 소유는 소비와 직결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사적 소유의 제한이 약하지만, 사회주의 생산양식에서는 사적 소유의 제한이 엄격하다. 결국 사회주의 소비 품목의 총량과 소비지출의 총합을 자본주의의 그것들과 등가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의 소비를 등가로 비교하는 '숫자'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

참고문헌

- 김태완, 김문길, 여유진, 김미곤, 김현경, 임완섭,...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 (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민기채. (2017).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관한 연구. 입법과 정책, 39(3), 455-480.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이철수, 우해봉, 조성은, 송철중, 정해식, 고혜진,...최요한. (2017).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사회보장제도: 통합기 단일체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성은, 민기채, 김예슬, 김유휘, 주보혜, 송철중,... 박희진. (2020).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일연구원. (2018).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UNFPA, DPRK. (2015).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2014*.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search.html?q=Socio-Economic+Demographic+Health+Survey에서> 2020. 9. 30. 인출.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4).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Measurement and Tasks of Living Costs of North Korean Residents

Kichae Min²⁾, Inae Hyun³⁾, Hyoju Kim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in an exploratory level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sumption” and to derive the tasks posed by the measurement. To this end, the ‘Basic Survey for Measuring the Standard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was conducted on 37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sources of income include business, remittance, employment, side job, and social benefits (pension) in order of descending importance. The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was 147,000 won (South Korean won). Food expenditures accounted for 58.3% of household expenditure, followed by clothing and footwear expenses at 9.9%, housing, heat and water expenses at 8.4%,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t 5.2%,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at 2.5%, health and medical expenses at 2.0%, and education at 1.7%. It was also found that North Koreans were using many of South Korea’s minimum cost of living items. However, additional items used by North Koreans were identified differently from South Koreans in terms of heat and water expenses, education expenses, culture and entertainment expenses, and non-consumption expenses. As tasks for measuring the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development of items suitable for daily life in North Korea, a survey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precise price conversion were presented.

2)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4) Seoul National University